

복합쇼핑몰 3중 가시화... 소상공인 상생대책 1년째 제자리

광주지역에 대형 복합쇼핑몰 3중 건립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지난해 강기정 시장이 출범을 약속했던 지역 상권 붕괴 우려 해소를 위한 상생발전협의체는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8일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 3중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영향 분석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말까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강 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상생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쇼핑몰 등이 들어 서면 준공 60일전에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광주는 복합쇼핑몰이 건설되기 전에 소상공인과는 의회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광주시는 지난 5월 '더현대광주' 등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반경 5km의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광주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광주시의 발표는 중소 상인, 자영업자 현실을 외면하고 대규모 개발논리와 유통 대기업의 입장만 반영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상생협의체는 구성조차 되지 않는 사이 복합쇼핑몰 3중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식까지 앞두는 등 현실화 되고 있다.

복합쇼핑몰 3중 중 '더현대광주'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오는 20일 착공식을 열고 2028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광주서구광주 시청 앞에서 광주전남상인·소상공인연합회가 "광주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3개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강기정 시장 "1년전 복합쇼핑몰 상생협의체 출범" 약속

더현대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어등산 스타필드 본격화

더현대광주는 착공에 앞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복합쇼핑몰 내에 지역장터를 개설하고 광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등을 발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측도 백화점 확장을 통한 '더그레이트 광주' 개발을 위해 유스퀘어문화관 철거에 나선데 이어 광주시와 사전협상을 진행하며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가 들어서는 어

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도 현지 법인 설립, 토지비 중도금 납부, 조성계획 변경과 시설계 추진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건립이 가시화 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전통시장상인연합회·청년단체·5개 자치구·상공회의소·시의원 등이 포함된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통시장상인회 등은 "광주 곳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섬에 따라 전통시장이 무

너졌는데 대형 복합쇼핑몰 3개가 동시에 영업을 하게 되면 지역 골목상권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며 "강 시장이 상생협의체를 통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논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구축에 따른 지역 상권 영향평가서가 이달말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특별보증 확대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가구 절반 이상 '내 집' 보유... 여성·5060 소유주 ↑ 개인 소유주택 1705만호, 전년 대비 1.9% ↑

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주택 소유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고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50·60대가 전체 소유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센터가 14일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1일 기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705만8000호로 전체 주택 1987만3000호의 85.8%를 차지했다. 개인 소유주택은 1년 새 31만6000호(1.9%) 증가했다.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은 1475만9천호(86.5%), 공동 소유는 13.5%로, 공동 소유 비중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p) 증가했다. 부부 공동명의 확산 등 사회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울산(90.4%), 경남(89.3%), 부산(88.5%)이 개인 소유 비중이 높았고, 전남(82.6%), 전북(83.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주택 소재지 내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가진 '관내 소유' 비중은 86.3%로 전년과 동일했다. 외지인 소유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30.6%)이었다.

◆여성 소유 비중 '사상 최고'... 50·60대 비중 절대적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총 1597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여성 소유자는 740만9000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해 통계작성 이래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여성 소유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04만1000명(25.3%), 60대가 367만6000명

(23.0%), 40대가 324만6000명(20.3%) 등 50~60대가 전체의 48.3%를 차지해 가장 두드러졌다. 1년 전과 비교해 50대(393만800명→404만1000명), 60대(355만4000명→367만6000명), 70대(188만명→200만7000명), 80세 이상(88만명→97만명)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증가했고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감소했다.

2건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 비중은 14.9%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0%), 충남(17.4%), 강원(17.0%) 순이었다.

◆가구 기준 소유율 56.9%...울산·전남·경남 높아

올해 일반가구는 2229만4000가구였으며, 이 중 1268만4000가구가 주택을 소유해 주택 소유율은 56.9%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5%p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 소유율은 울산(64.0%), 전남(63.4%), 경남(63.3%) 순으로 높았고 서울(48.1%)은 가장 낮았다.

주택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는 평균 13억4000만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으며 평균 2.3호를 소유했다. 반면 하위 10%는 평균 자산 3천만원에 실질적 소유주택수는 1호 미만(0.97호) 수준이었다.

2023년 무주택자 중 올해 유주택자가 된 인구는 81만8000명(2.4%)이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79만명)이 1건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난해 유주택자 중 올해 무주택이 된 인구는 36만5000명(2.4%)으로 집계됐다.

뉴스시스

전라남도는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15년만에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인증대책 회의를 열어 동계작물 재배 시 화학비료 살포 금지 등 인증 취소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상승과 친환경 비 공공비축미 전량매입, 쌀 생산조정제, 친환경 비 신규 재배 확대 등으로 10월 말 현재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3만 5천328ha다.

이는 지난해 말(3만 4천294ha)보다 1천34ha 늘어난 것으로, 인증면적 증가는 2009년 이후 15년만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도·시군 친환경 농업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 취소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대책 회의를 지난 11일 전

전남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5년만에 증가 전망 10월 말 현재 3만 5천328ha 인증 전년보다 1천34ha 늘어

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했다. 인증대책 회의는 전남도 올해 중점 추진 방향인 유기농 중심의 저탄소 친환경농업 확산과 품목 다양화로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해 농업인과 공무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증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분기별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10월 말 현재까지의 인증실적을 점검하고,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이상기후 등 불리한 농업환경 요인 등에 따른 인증 취소 방지와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췄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는 논두렁 제조

사포, 병해충 방제 시기 합성농약 사용 등이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올해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인증농가와 방제업체 안전성 강화 교육, 공동방제 사진신고제와 드론활용방제 교육, 친환경농업단지 현장 방문 지도점검 등으로 인증취소 면적이 줄고 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인증 취소 방지대책으로 '논두렁 조성 효율화 지원사업' 올해 시범 추진, 유기농 비 재배필지에 동계작물 재배 시 화학비료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자연영, 헤어리베치 등 두과 녹비작물(양분과 유기물 공급) 공급 확대 등에 나

서고 있다. 또 친환경 비 인증농가 타인 임대 금지, 공식된 유기질비료 등 유기농업 자재 사용 등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함께 생산단계에서 친환경 육묘상자 처리제 사용과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농자재 사용 금지, 출하 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의무화, 농업인에게 영농시기별 친환경인증 기준 안내 문자 발송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인증 취소 방지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실행력을 높이고 친환경농업 단지화와 집적화, 인증품목 다양화를 통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소비자가 신뢰하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안전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목포항 산업·에너지·관광 복합항만 육성 머리맞대

전라남도는 1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목포항 발전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목포항을 산업·에너지·관광이 어우러진 복합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목포시, 목포상공회의소, 목포해양대학교, 전남연구원, 전남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항만운영·물류업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목포항 기능 재정립과 부두 확충 ▲해상풍력 산업 지원 거점항만 구축 ▲항만 재생과 관광·도시 연계 ▲노후 부두 리뉴얼 ▲에비타당성 대응 전략 등 목포항을 서남권 산업지원 거점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김화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과제" 주제 발표에서 해상풍력 등 신산업 물류 수요 대응을 위한 부두 기능 재편 및 신설, 화원산단 개발, 내항 항만 재생을 통한 도심 연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목포항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전남도 데이터산업을 뒷받침할 해상풍력의 핵심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항만으로서 에너지, 물류, 해양 친화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항만으로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신종필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